

2011 韓國金融育學會
春季學術大會 發表論文

韓國의 토빈稅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Introduction Tobin Tax in Korea

姜 哲 勝*

< 국문 초록 >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예일대 교수이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0년대에 단기적인 지나친 환투기와 황을 변동을 방지 하기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데서 유래되어 국제적 합의하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모든 현물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uniform tax rate)을 적용하는 것이다.

유럽의회가 2011.03.08일 금융 거래에 과세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토빈세 도입 권고안을 찬성 520-반대 127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은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결의안은 집행위가 토빈세의 타당성을 즉각 검토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EU만이라도 먼저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명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에게 '금토빈세'를 도입해 빈곤 국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가디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초 게이츠 회장에게 토빈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영국인의 51%가 토빈세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대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핫머니 유출입을 규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F가 그동안 반대해오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대규모 단기자금 유입을 통제해 금융거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된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빈세제도 도입의 국제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 Words : IMF, 외화자금, 핫머니, 토빈세, G20.

* 한국세무회계경영아카데미 학장, e-mail: cskang46@naver.com, CP : 010-9008-8004.

韓國의 토빈稅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1. 序 論

토빈세 도입은 주요 20국(G20)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에 의해 적극 추진돼왔으나 미국과 캐나다가 반발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예일대의 제임스 토빈이 지난 1978년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 채권, 파생상품 및 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는 투기 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이동으로 각국 통화 가치가 급등락해 통화 위기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다.

유럽의회가 2011.03.08일 금융 거래에 과세하는 이른바 `토빈세` 도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토빈세 도입 권고안을 찬성 520-반대 127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결의안은 비록 구속력은 없으나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갖는다. 결의안은 집행위가 토빈세의 타당성을 즉각 검토하는 한편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어려울 경우 EU만이라도 먼저 실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 거래에 0.05%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EU에서 연간 약 2000억 달러, 전 세계적으로는 6500억 달러가 확보될 것으로 토빈세 지지론 자들은 집계했다.

2011.4.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린스턴대의 폴 크루그먼과 케임브리지대의 장하준, 컬럼비아대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 등 전 세계 경제학자 1000명은 G20 재무장관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토빈세는 외화자금이 유출입 되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으로, 강력한 핫머니(단기 투기자금) 규제 수단 중 하나다. 글로벌 금융 거래에 0.05%의 토빈세만 부과하더라도 연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개도국과 후진국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 경제학자의 주장이다. 이들 경제학자는 "금융위기는 규제되지 않은 금융정책의 위험성을 보여줬다"며 "토빈세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며 도덕적으로도 옳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토빈세 도입이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영국의 경우 이보다 10배나 높은 0.5%의 주식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시티(영국 금융가)의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G20이 토빈세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올해 G20 정상회의 순회 의장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이달 초 게이츠 회장에게 토빈세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비정부기구(NGO) 옥스팜의 최근 여론조사에선 영국인의 51%가 토빈세 도입을 찬성한 반면 반대는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흐름의 자유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핫머니 유출입을 규제하는 '자본통제(capital control)'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IMF가 그동안 반대해오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의 하나로 인정한 것으로, 대규모 단기자금 유입을 통제해 금융 거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외신들은 분석된다.

2010년 8월에 앵글로아메리칸 금융제국의 한 고위 정책결정자가 토빈세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토빈세는 국경을 넘는 금융거래에 붙는 세금이다. 그 고위 관료는 영국 최고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청(FAS)의 어테어 터너 청장이다.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부문과 중

중 역겨울 정도의 막대한 금융계 보수 수준을 우려해왔던 터너는, 세계적 차원의 금융거래 과세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터너의 언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붕괴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터너의 말은 이제 상황이 크게 변했음을 암시한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 1970년대에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는 ‘국제 금융이란 돌아가는 바퀴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명해졌다. 토빈은 환율의 지나친 변동을 우려했다. 그는 외환시장을 드나드는 단기자금에 대한 과세가 투기를 억제하고 국내 **거시경제** 운용의 조정 **공간**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빈세는 국외원조와 백신, 녹색기술 등의 확산 운동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비대해진 금융부문의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많은 비정부기구와 지지단체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또 프랑스와 일부 유럽내 지도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터너가 얘기하기 전까지, 세계 금융시장의 두 중심지인 미국과 영국의 어느 주요 정책결정자도 토빈세에 대해 우호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

토빈세의 이점은 장기 국제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고 단기적인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는 모든 금융거래에 거래액의 0.25%를 세금으로 매긴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즉시 과세액보다 적은 수익을 추구하는 데이트레이딩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 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장기 외환거래도 차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거래 관행의 종언을 슬퍼할 이유가 없다.

반면에 훨씬 장기적 전망을 좇는 투자자들은 토빈세에 의해 크게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자본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토빈세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잘못 운영하는 정부를 응징하는 금융시장의 기능을 방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토빈세는 엄청난 돈도 거둬들일 것이다. 국제 외환거래에 붙는 적은 세금으로 인한 수입은 매년 수천억 달러(수백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확한 토빈세 수입액이 얼마나 되든지간에 국외원조액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속협상인 도하라운드 무역협상 타결로부터 얻게 될 혜택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고 말하는 건 무리가 아니다.

워싱턴에 있는 **경제정책** 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소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토빈세 부과를 빠져나가기 훨씬 어렵게 할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금융회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신고하는 직원에게 정부가 추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 이는 자체감시를 위한 꽤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토빈세가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불화를 조정할 순 없다. 이런 세금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을 막지 못한다. 국외 차입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않은 통화 및 재정정책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지닌 정부들을 설득해, 이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도 없다. 이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시경제적**, 금융적 치료약이 필요하다. 만약 우리가 카지노식 가치를 좇는 세계 금융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길 원한다면, 토빈세는 그 좋은 출발점이다¹⁾.

최근 전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명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에게 ‘토빈세(일명 금융**거래**세 또는 로빈후드세)’를 도입해 빈곤 국가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토빈세는 **외화자금**이 유출입 되는 거래에 매기는 세금으로, 강력한 핫머니(단기 투기자금) 규제 수단 중 하나다.

1) 대니 로드릭 (2009),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경제학 교수로서 토빈세 도입의 논리적 타당성과 토빈세 과세방법을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제시했다.

IMF가 그동안 반대해오던 자본통제를 정책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단기 자금 유입을 통제해 금융 거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된다.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토빈세제도 도입의 국제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2차 세계화의 특징과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

2.1 세계화의 특징

세계화는 국경에 의한 경제적 교류의 단절을 연결하여 경제발전을 촉진하지만 이로 인해 국가 간 경쟁도 격화된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던 기업이 세계 경쟁에 노출된다. 그 결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빠르게 세계시장을 석권하며 큰 수익을 올리는 반면 경쟁에서 뒤처진 기업은 쇠퇴하는 승자독식사회(winner-take-all-society) 현상이 나타난다.

세계화로 일부 기업은 성장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세계적 대형 기업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으나, 각 국가에서는 쇠퇴하는 산업과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했다. 세계적 기업은 높은 수익을 올리지만 높은 수익이 국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 외국인이 보유하는 지분비율도 높기 때문에 성장의 과실이 자국민에게 전파되는 비율이 이전보다 낮아졌다. 그 결과 기업의 높은 수익이 국내 수요를 증대시키는 전파효과가 현저히 저하되었다.

각 국가 내에서 세계화로 인한 수혜 집단과 피해 집단이 현저하게 구분되게 되는데, 특히 그 이전부터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던 중소기업이나 비숙련 노동자 등이 대거 피해 집단에 속하게 된다. 세계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문제는 단기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2.2 세계화의 4단계 진행

제2차 세계화는 다시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독일과 일본이 급속히 성장하는 1980년대 이전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전파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미국의 주도적 지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와의 체제 경쟁으로 인해 시장경제를 채택한 국가 사이의 갈등은 부각되지 않으면서도 세계화가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다. 그러나 두 차례 석유팽동으로 인한 충격으로 세계 각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던 시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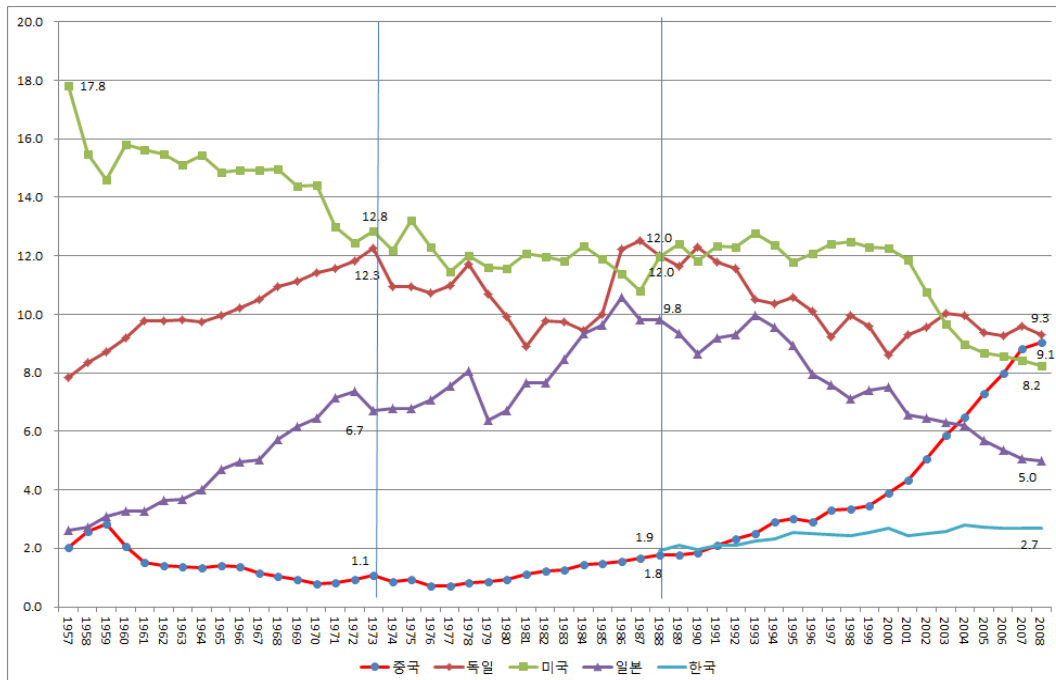
석유팽동으로 인한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한편에서 선진국 사이에서는 미국·독일·일본의 각축이 진행되던 1980년대를 편의상 2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 대 후반이 되면 미국의 주도적 지위는 크게 위협을 받게 되고, 세계 경제는 미국·독일·일본이 주도하는 시기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80년 대 초부터 제조업을 거의 내주다시피하며 독일과 일본의 추격에 시달렸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레이건의 감세와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바로 이러한 미국의 위기에 대한 대응전략이었다.

제3단계는 다시 미국이 주도권을 회복하는 단계이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인해 성장이 지체되고, 독일은 통일로 인한 내부적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했다.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 경향을 주도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과 영국은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을 추구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소득 불균등도가 악화되는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세계화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대거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한 새로운 경제전략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책에 힘입어 미국은 1990년대 장기 성장을 지속하면서 다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 시기 유럽은 고질적인 고실업으로 인한 문제에 봉착하면서 동시에 지식정보화사회에서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 기술분야에서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에서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영국 진보 진영이 제시한 제3의 길에 대해 비판적 분석에 착수하면서 유럽의 발전전략을 모색한다.

또한 이 시기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BRIC's)이 주축이 된 대규모 개발도상국의 약진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2000년 이후 제4단계의 특징적 현상이 되었다. 중국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개발도상국이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접근하면서 고속성장을 거듭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급속도로 높아져, 2009년에는 마침내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반면 미국은 2000년대까지 지켜오던 세계시장 점유율 12% 수준이 급격히 무너지면서 중국에 뒤처지게 되었다.

그림 2 세계 수출액 대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한국 수출액의 비중



자료 : 한국은행

2.3 세계화와 기술진보

제2차 세계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급격히 확산된 측면이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은 전 세계 지사와의 손쉬운 거래를 가능하게 하면서 거대기업을 탄생시키는데 기여했고, 전 세계 기업들의 직접 거래를 용이하게 했다. 그 결과 부품이나 서비스의 해외주문(offshore outsourcing)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국내 부품기업이나 노동자들을 간접적으로 세계 경쟁에 내몰리게 했다.

각 국가 간 임금 격차는 결국 선진국의 비숙련 노동자,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규모 개발도상국이 부상하게 되자 이번에는 그들보다 앞서 성장했던 대부분 국가들에서 유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서 비숙련 노동자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고, 따라서 기술개발에 의해 생산성이 올라가는 숙련 노동자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위축을 초래했다.

그 결과 많은 국가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양극화 등으로 인해 소득분배 상황이 악화되었다. 소득분배의 악화가 세계화 때문인가 기술진보 때문인가는 경제학의 중요한 과제로 연구되었으며, 초기에는 기술진보의 탓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에 의한 영향이 크다보니 세계화의 영향도 간과할 수 없다는 주장이 새롭게 호응을 얻고 있다.

2.4 세계화와 국제적 불균형 - 경제위기

세계화는 국제적 불균형을 야기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독일 등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한 반면 미국과 여타 유럽 국가들은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다. 미국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한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했다. 세계화 시대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여타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취했다.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도상국에서 저가의 상품이 수입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되자, 각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완화책을 추진했다. 세계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는 지속화되면서 금융완화책은 다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고 자산 분배의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가계대출을 이용해 자산을 보유하려고 나섰고 그 결과 자산거품이 일게 되었다.

결국 과도하게 부동산에 투자한 각 나라에서는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에 동반 부실화되었고, 재정이 취약한 유럽의 중소국가들부터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 불균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III. 세계 각국의 세계화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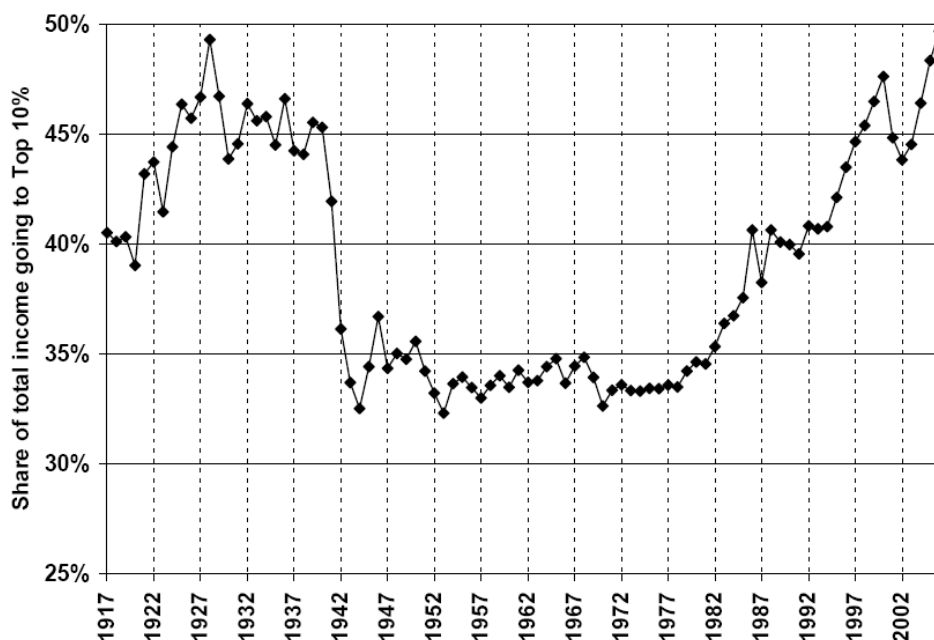
3.1 미국과 영국의 보수적 대안 - 신자유주의 전략

미국과 영국에서 1980년대 진행된 감세,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공급주의 경제학이 득세하였고, 대규모 적대적 인수합병을 통해 경제의 비효율성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속했다. 이러한 구조개혁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에서 경제의 유연성이 한 단계 높아지

면서 단기간 실업이 늘고 안정적 일자리가 줄어들었으나, 상당 기간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실업률을 기록함으로써 그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러나 양극화 심화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 금융산업의 비대화라는 부작용을 빚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과 영국의 소득분배를 급격히 악화시켰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집권 이후 악화된 소득분배는 2000년대에도 이어졌다. 결국 2006년을 전후에 대공황 이전과 같은 최악의 소득분배 상황이 되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 이러한 미국과 영국의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최소한 2000년대 중반까지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의 여타 유럽국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정책에우 해 소득분배가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미국의 상위 10% 소득 비중 추이(1917-2006)



자료 : Saez(2008)²⁾

3.2 유럽의 신자유주의 대안 - 해외자본 유치 전략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영향을 받은 세계 각국은 해외 자본의 유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럽의 후발국가인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가 대표적 사례이다. 해외 자본의 유치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자유화 등 전면적인 경제 제도의 변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성공적으로 해외 자본이 유입되어 고속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완화와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자본 유입 허용으로 인해 2008년 경제

2) Saez, Emmanuel, (2008), '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위기가 발생하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위기에 직면하는 문제점을 노정했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고속성장을 위해 안정성을 포기하는 경우의 위험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유럽은 아니지만 중동의 두바이는 세계화 시대의 발전전략으로 대규모 개발 위주의 전략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하는 등 단기간에 고속성장을 하며 사막지대를 단기간에 중동의 허브로 도약시켜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초기에는 랜드마크 건설을 통해 성공적으로 외자의 유입을 활성화하는데 성공했으나, 2008년 경제 위기로 일시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외자에 의한 대규모 개발의 위험성을 알린 사례가 되었다.

3.3 미국과 영국의 진보적 대안 - 제3의 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90년대 들어 진보적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세계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시장의 활력을 높이려는 미국 레이건과 영국 대처시대의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계승하면서도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의 과실이 폭넓게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지향했다. 영국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사회투자국가를 강조했다면, 미국에서는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했다.

참여정부에서 소개한 미국의 해밀턴 프로젝트는 바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기회와 번영, 성장을 위한 경제전략'(An Economic Strategy to Advance Opportunity, Prosperity, and Growth)이라는 부제는 성장전략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미국의 당면한 문제를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주요 성장촉진 영역(교육, 의료, 에너지, 기초과학연구, 인프라)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로 적시하고 감세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해밀턴 프로젝트의 3대 원칙은 이러한 전략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첫째, 폭넓은 계층의 국민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성장은 더 견고하고 지속가능하다. (Broad-based economic growth is stronger and more sustainable.) 둘째, 경제적 안정성과 성장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 강화된다. (Economic security and economic growth can be mutually reinforcing.) 셋째, 효율적인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Effective government can enhance economic growth.)

이러한 원칙하에 4가지 중요한 정책기조를 제안하고 있는데, 1) 교육과 근로, 2) 혁신과 인프라, 3) 저축 및 사회보험, 4) 효율적인 정부가 그것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람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략적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렇게 보수와 진보의 전략이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서로 보완하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3.4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제고 대안 - 황금삼각형 전략

전통적 사회민주주의 국가였던 덴마크도 세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초에는 10%에 가까운 실업률이 지속되기도 했다. 실업자들이 복지 혜택에 의존하면서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어 이중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던 덴마크는 1994년 실업보험 체계를 개편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유연한 노동시장,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세 축으로 하는 이른바 황금삼각형(Golden Triangle) 모형을 정립하게 되었다.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위주로 한 사회안전망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갈등 요소를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는 정책을 활성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고, 이 제도를 통해 노·사·정 협의체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역시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덴마크의 황금삼각형 모형은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전통적 사회모형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에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결과 통합 유럽의 보편적 전략으로 추천되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실정에 맞도록 응용하여 적용하려는 모범적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5 유럽의 사회통합 유지 대안 - 리스본 전략

유럽은 격화되는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통합을 단행했다.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유럽 국가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된 전략으로 세계화에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통합이 가능했던 것은 세계화에 의한 압력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유럽은 국가 간 차이를 극복함과 동시 유럽의 통합정신을 살리는 경제전략을 모색했는데, 마침내 2000년 유럽의 정상들이 리스본에서 새로운 전략에 합의하게 되었다. 이 리스본 전략의 목표를 1)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하여,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3)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역동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잡았다. 경제개혁, 고용증대, 사회통합이라는 3대 분야를 설정했는데, 이러한 분야의 선정에서 그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경제개혁 분야에서는 정보화 진전, 연구·혁신 촉진, 유럽 시장 통합 가속화, 거시경제정책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증대 분야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주축으로 한다. 사회통합분야에서는 고용, 의료, 사회보장 등을 강화하여 전통적 유럽 사회통합 모형을 발전시키는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6 다양한 세계화 대응 전략의 평가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노출시켰다. 위기가 시작된 미국을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을 추구했던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가 가장 먼저 위기를 맞았다. 중동의 두바이가 뒤를 이었고, 그 이후 남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위기가 퍼져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국가들이 위기에 매우 취약하다는 속성을 드러냈으며, 반면 남부유럽처럼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들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냈다.

표1은 주요 국가의 상대빈곤률을 비교한 것이다. 상대빈곤률이 14%를 상회하는 국가들은

고위험국가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위기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위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영미형의 개방정책을 추구했던 국가들에서 상대빈곤률이 높으면서 동시에 위기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덴마크와 스웨덴과 같은 국가들은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면서 동시에 상대빈곤률을 낮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IV. 토빈세 導入의 必要性

4.1 투기 대상이 된 통화

‘닉슨 쇼크’는 1971년 8월 15일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달러 방위정책으로, 달러와 금의 교환을 정지하고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10%의 수입 과징금을 부과해 충격을 주었다. 그 후 일본 엔화는 그때까지 1달러 360엔의 고정환율제에서 조금씩 시세가 바뀌는 변동환율제로 바뀌었다. 이것을 계기로 국제환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통화가 투기 대상으로서 이익을 낳게 되는 구조는 다음과 같다. 외국에 갈 때 용돈으로 5만 엔을 가지고 가서 1달러 100엔의 환율로 교환하면 500달러가 된다. 100달러가 남아서 가지고 돌아왔는데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1달러 120엔(달러 강세, 엔 약세)이 되었다면 2,000엔을 번 셈이 된다. 짧은 여행 기간에 이 정도로 환시세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드물지만, 변동 폭이 적어도 금액이 많으면 이익이 아주 많이 생긴다.

현재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기업이 국제 환시세를 이용한 ‘투기’를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어 각국의 통화가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제 환시세를 이용한 투기성 통화 거래액은 계속 늘어, 변동환율제가 시행된 다음해인 1973년에는 4조 달러였지만 1980년에는 40조 달러, 현재는 470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원래 환거래는 다른 통화 간의 대금 결제를 위한 것이었는데, 각국의 통화가 투기 대상이 되면서 환시세는 바로 불안정해졌다. 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에 공장을 세울 때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을 결제하려면 통화를 교환해야 한다. 대금 결제를 위해 통화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에서 지불까지의 기간 사이에 환율이 되도록 변하지 않고 안정된 쪽이 좋다. 하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불안정하고 단기간에 변동 폭이 크면 클수록 좋은 상황이 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외환거래 실태를 보면, 무역 등의 대금 결제를 위한 환거래는 전체 가운데 5% 정도뿐이고, 80% 이상이 투기를 위한 거래다.

4.2 통화위기의 메커니즘

국제 환시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통화거품’이라고 하는 통화위기가 쉽게 발생하게 되었다. 환투기를 한 사람들은 자신이 산 특정 통화의 가치가 오르기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통화가 오를 것으로 예상해 너도나도 사다 보면 시세는 계속 오르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람들의 거래를 부추긴다. 이런 상황이 전 세계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환시세가 본래의 통화가치를 크게 벗어나 단시간에 큰 폭으로 오른다. 이러한 ‘거품’의 절정

기에 어떤 계기로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누구나 본래의 통화가치보다 크게 높아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통화를 속속 팔게 된다. 그래서 한순간에 통화가격이 하락하고 통화위기가 닥치게 된다.

통화위기의 발생에는 헤지펀더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헤지펀더란 거액의 자금을 가진 기관투자자로, 거액의 자금이 있으면 환시세를 조작하는 일이 가능하다. 특정 통화를 사들여 시세를 올리고, 다른 투자가가 사자는 분위기로 몰려 최고치에 오를 때 한꺼번에 팔자로 돌아선다. 싼 가격으로 산 통화를 최고치로 팔면 거액의 시세 차액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물론 그 통화의 가격은 빠르게 하락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7년까지 22년간 세계 각지에 158건의 통화위기가 발생했다고 한다. 90년대 이후의 주요 통화위기만 해도 유럽통화제도(EMS)에 대한 투기적 공격(1992~93년), 멕시코 위기(1994~95년), 아시아 통화위기(1997~98년), 러시아 위기(1998년), 남아프리카 위기(1998년), 브라질 위기(1999년), 남아프리카 위기(2001년), 터키 위기(2001년), 아르헨티나 위기(2001년), 브라질 위기(2002년) 등이 있다. 통화위기가 발생하면 개발도상국은 바로 경제위기에 빠져 점점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내몰린다.

태국에서는 1995년까지 10년간 연평균 9%가 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해왔지만, 동아시아 통화위기 이후인 1997년에는 1.7%, 1998년에는 8.0%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기가 후퇴했다. 이 시기 아시아 각국 통화의 대 달러 시세는 거의 50% 하락했다. 결국 달러로 결제되던 수입품의 가격이 2배가 된 것이다. 실업률도 한국의 경우 4배, 태국이 3배, 인도네시아가 10배로 뛰어올랐다.

4.3 통화위기 억제하는 토빈세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 한 나라의 경제를 혼란에 빠트리고 민중에게 고통을 주는 통화위기를 국제사회가 방치해도 좋은 걸까. 현재 수년간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토빈세이다.

198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 박사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부른다. 토빈세는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제안된 세제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첫째는 모든 투기를 대상으로 낮은 세율의 과세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를 위해 빈번히 통화거래를 하는 투자가는 거액의 거래세를 지불하게 된다.

둘째는 2단계 과세방식의 도입이다. 환시세가 소정의 변동 폭 안에 머물고 있는 한 환시세는 '정상'으로 보여 아주 낮은 세율의 '통상적'인 세(0.01%~0.15%)가 적용되지만, 설정된 변동 폭을 넘어서면 '이상(異常)'으로 판단, 거래차익에 대하여 80% 또는 100%라는 아주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2단계 과세방식에 따라 통화위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구상되어 있다. 토빈세 도입의 관건은 각국이 토빈세 도입을 승인할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토빈세를 도입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그것이 도망갈 구멍이 돼, 토빈세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개발도상국의 민중이 경제적인 혼란에 빠져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어도 '내가 돈을 버는데 뭐가 나쁘냐!'고 하는 야만적인 생각이 시장에서 큰 손을 흔들고 있다. 각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뛰어넘는, 인류사회를 위한 이념을 추구해야 할 때다.

토빈세는 개발도상국의 누적 채무를 해결하고, 빈곤과 환경문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자금원으로도 기대가 된다. 예를 들어 현재의 환거래액에 0.01%의 세금을 부과하면 470억 달러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유엔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의 빈곤을 없애는 기초적인 사회적 지출에 필요한 금액은 연간 400억 달러, 세계 최빈국 41개 나라의 누적 채무 총액이 1,690억 달러(1998년 현재)이므로, 세수의 운용으로 이들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표 1 토빈세를 요구하는 세계의 움직임>

년 도	각 국 추 진 내 용
1999년	캐나다 의회에서 통화 거래세 도입을 정부에 요청
2001년 1월	영국의회에서 정부가 토빈세의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결의를 포함
2001년 11월	프랑스국민회의에서 토빈세를 포함한 재정법 수정을 가결
2004년 7월	벨기에 의회가 토빈세 법안 가결
2005년 9월	프랑스, 독일이 연대세의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항공권 연대세 도입의향을 표명
2006년 7월1일	프랑스가 항공권 연대세 도입시작 (브라질, 노르웨이, 한국 등 17개국도 도입 추진)

지금도 국제적인 통화거래에 대해 세계상 우대조치를 채택함으로써 투기 자금을 끌어들이는 국가나 지역이 있다. 이러한 국가나 지역이 토빈세 도입에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토빈세 도입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어떻게 합의를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며 예일대 교수이던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교수가 1970년대에 단기적인 지나친 환투기와 황울 변동을 방지 하기위하여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데서 유래되어 국제적 합의하에 자본 유·출입으로 인한 통화의 교환이 수반되는 모든 현물거래에 저율의 단일세율(uniform tax rate)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1960년대 말 이후 선진국들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환거래의 규모가 급증하였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그 이후 Spahn은 1996년 토빈이 제안한 저율의 세금부과가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2단계 토빈세(Two-tier Tobin tax)’을 제안했다. 이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Tobin(1974, 1978)의 고유한 토빈세나 Spahn(1996)의 2단계 토빈세 등은 기본적으로 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환거래나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토빈세 도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Bhagwati(1998)과 Spahn(1995), Stiglitz(1989)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토빈세와 같이 자본거래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안정성을 기여하는데 한다고 주장했다.

Davidson(1997, 1998)과 Gal and Lysandrou(2003)은 토빈세와 같은 거래세부과로 환율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조세부과가 유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Fisher(2001)와 Summers(2000)은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선진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저소득 국가들이 중위소득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용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토빈세 부과를 반대했다.

V. 先進國의 토빈세 導入 事例

토빈세는 제안당시에는 그다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1995년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인 G-7의 의제로 상정되었다. 그 이후 유럽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토빈세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1998년 창립된 NGO인 ATTAC은 토빈세를 도입하여 얻은 재원을 제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데 상용하자고 주장하며 각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토빈세 도입에 대하여 미국은 국제적 금융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IMF도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Dominique Strauss-Kahn IMF 총재는 ‘토빈세’는 오래된 아이디어로 오늘날 시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토빈세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G-20 회의에서 토빈세의 도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토빈세를 실제로 시행한 나라는 브라질이 유일하며, 벨기에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에는 토빈세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5.1 브라질³⁾

브라질은 1990년대에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외채가 급증하자 1993년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하여 금융 거래세를 도입했다.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금융거래세의 세율은 5년 미만의 해외차입에 대해서는 그 수익액의 3%, 고정수입을 가져오는 외국인 투자에는 투자액의 5%로 정했다. 그 이후 브라질은 외환시장의 상황에 따라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금융 거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09년 10월19일에 브라질은 레알화의 과도한 절상을 억제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브라질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하여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2008년 말 이후 지속된 레알/달러 환율의 하락이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금융 거래세 부과가 발표된 2009년 10월 중순 이후 레알/달러 환율의 하락세는 2009년 11월 말 현재까지 주춤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단기적으로는 레알/달러 환율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당분간 레알화의 절상 추세는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은 1960년 말 이후 선진국들이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외환거래의 규모가 급증하였고 자본의 흐름에 따라 환율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그 후 Spahn(1996)은 토빈이 제안한 저율의 세금 부과가 투기성 자본의 이동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2단계 토빈세를 제안했다. 이는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 변동이 심한 시기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Tobin(1974, 1978)의 고유한 토빈세나 Spahn(1996)의 2단계 토빈세 등은 기본적으로

3) Cardoso and Goldfajn(1997) 참조

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외환거래나 외환보유액의 기회비용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토빈세 도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즉,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므로 토빈세와 같이 자본거래에 제약을 부과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토빈세와 같은 거래세 부과로 환율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조세부과가 유동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선진국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고 저 소득국가들이 중위소득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토빈세 부과를 반대했다.

토빈세는 제안 당시에는 그다지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으나 1990년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커짐에 따라 1995년에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의 의제로 상정된 바 있다.

창립된 NGO인 ATTAC은 토빈세를 도입하여 얻은 재원을 제3세계의 빈곤을 퇴치하는데 사용하자고 주장하며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5.2 벨기에

2004년 7월 벨기에 의회는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2단계 토빈세 도입 법안을 승인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벨기에에서 발생한 직·간접적 현금거래, 선물거래에 대하여 은행대체제도의 이용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며, 추가비용을 포함한 총 외환거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외환거래의 성격에 따라 2단계 세율 적용한다.

· 일반적인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적 목적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유럽경제재무장관회의에 의하여 투기적 거래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세율은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10,0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의 외환거래 중앙은행 및 법률에 의해 승인된 국제기구 등의 외환거래는 토빈세를 면제한다.

토빈세 도입에 대한 법안은 유럽경제통화동맹의 모든 국가들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유사한 법안을 채택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⁴⁾하되 이는 다른 국가들의 동조 없이 단독으로 토빈세를 시행할 경우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3 영국

2009년 8월 영국 금융감독청 Adair Turner 의장이 금융거래세를 제안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여 왔던 미국과 영국의 정부당국 가운데 특히 영국 금융감독청장이 금융거래세의 부과를 주장한 것은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주도적으로 강조해 온 두 나라의 관례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4) 한편 프랑스도 역시 2001년 외환거래에 대하여 0.01%에서 0.1% 사이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의 시행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받아들일 때까지 유보하는 법안을 채택하였음

학계가 아닌 영국 금융감독 당국의 주장이 이러한 주장을 함에 따라 보다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위기 발생 이후 영국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하여 수익성과 위험성 높은 경영활동을 억제해 왔으며 토빈세 도입은 이와 관련하여 강구된 추가 조치이다.

토빈세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불필요한 자금거래가 줄어들고 안정적인 경영의사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Gordon Brown 총리도 2009년 11월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은행의 방만한 영업활동으로부터 각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토빈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Turner 의장의 의견에 동조를 표했다.⁵⁾

한편 영국의 재무부장관 Alistaire Darling은 영국 금융시장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영국은행협회 등도 영국경제에 있어 은행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빈세 도입 들을 통한 시장 축소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 토빈세는 정상적 은행 경영활동을 방해하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실적 감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또한 토빈세 도입은 적용세율 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의 국제적 합의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VI. 토빈세 導入 前提条件

6.1 전담국제기구의 필요성

토빈세의 시행이 글로벌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며, 과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과 의사결정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개별국가로 하여금 토빈세 체제의 합의들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토빈세 이행을 강제하며, 토빈세 운영을 개별국가에 맡길 경우 세수 확보를 위한 조세 경쟁으로 토빈세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토빈세(Tobin's Tax)는 지난 198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교수 이름을 딴 것이다. 토빈 교수가 1970년대 초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소폭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한 데서 유래합니다.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대체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환투기 등 단기적인 국제 자본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빈 교수가 세금 부과를 주창한 것. 즉, **국제 자본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적 자본이동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금을 빈국의 개발에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토빈세를 주장한 것이다.

케인즈 이론의 STT(Securities Transactions Tax)를 외환시장의 범위에 적용시켰다는 의미에서 토빈 교수의 토빈세는 CTT(Currency Transaction Tax = 금융거래세)라고도 불린다. 토빈 교수는 '국제금융이란 돌아가는 바퀴에 모래를 뿌려야 한다'고 언급했고, 환율의

5) 2009년 11월에 열린 G-20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토빈세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미국과 러시아 등은 국제금융거래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반대한 바 있음

지나친 변동성을 우려했으며, 외환시장을 드나드는 단기자금에 대한 과세가 투자를 억제하고 국내 거시경제 운용의 조정 공간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때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이 우려되었는데요.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재정 개입으로 인해 우려했던 상황은 피할 수 있었고, 금융위기도 극복하여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추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번 위기의 책임을 금융권에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시사하고 여러 가지 입법을 추진 중이며, 유럽 국가수반들 사이에선 토빈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토빈세만 언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다.

- 1) **금융보험금(insurance levy)**: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강제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하여 금융위기 발생 시의 비용을 충당
- 2) **정리기금(resolution fund)**: 금융기관의 시스템 위험도에 따라 정리기금에 납입하여, 위기 발생 시 정리금융기관 해체에 사용
- 3)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주식, 채권, 파생상품, 외환 등 모든 금융거래에 과세하는 세금

6.2 토빈세 도입의 현재진행상황

최근 금융거래세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사실 토빈 교수의 제안은 처음엔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에 따른 장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였으며 자본 통제로 수익 창출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을 염려한 금융계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토빈세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다시 생겼다.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아탁(ATTAC: 시민 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과세연합)이라는 비정부 조직이 만들어졌을 정도. 그리고 최근 브라질 정부가 헤알화의 지나친 강세를 막기 위해 자국으로 유입되는 미국 달러화에 대해 토빈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토빈세가 국제 금융시장에 이슈로 부각됐다.

브라질 외에도 세계 각국이 토빈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청장(FAS)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어테어 터너는 지난 8월 금융산업의 과도한 팽창, 특히 금융 부문의 과도한 수익과 보상을 억제할 방안으로 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제안했다. 최근엔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12개국 각료들은 토빈세 도입 문제를 연구할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모든 금융거래에 0.005% 세금을 부과해 개발원조 자금을 연간 450억 달러 조성하기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이사회는 G20 정상회의 때 금융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유럽이나 반세계화 진영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토빈세지만, 정작 토빈세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우선 세계 모든 국가가 합의하고 준수해야 토빈세의 효력을 볼 수 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조세피난처로 인해 이러한 자본 통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자금 흐름에 왜곡이 생길 수 있으며, 토빈세가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즉, 환율이나 금융자산 가격 불안은 자극할 수 있다는 염려인데, 스웨덴은 토빈세를 본떠 1980년대에 증권거래세를 도입하였지만 이로 인해 증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결국 1991년 이를 포기한 적도 있다. 또한 토빈세는 이미 유입된 자금의 유출 제어에는 도움이 되지만 추후에 있을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 토빈세 시행에 앞서 외환보유액을 더 늘려 대외충격에 대한 흡수력을 높이거나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한국 은행간 외환스와프 협정을 상시화,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가자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토빈세를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까?

토빈세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Two-Tier Tobin Tax는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기존 토빈세의 약점을 보완하여 환율이 목표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만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Two-Tier 토빈세라고 한다. 즉, 목표환율 범위를 설정하여 환율이 동 범위 밖으로 벗어난 외환거래에만 중과세를 부여함으로써 환율의 지나친 변동을 방지한다.

환율밴드(band)제와 달리 외환보유액을 소모시키지 않고 목표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Two-Tier 토빈세의 장점이다.

Two-Tier 토빈세는 변동범위를 벗어난 주식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비슷한데, 서킷브레이커가 증시의 변동성을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연구가 다수 있다.

토빈세의 부과로 인해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투자자의 해지수요 등 실수요 거래도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역외 외환거래와 단기 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을 통한 우회거래를 차단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위싱턴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소장이 언급했던 것처럼, 토빈세 부과를 빠져나가기 훨씬 어렵게 할 여러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금융회사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신고하는 직원에게 정부가 추정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한다면 이는 자체 감시를 위한 아주 효과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대니 로드릭 하버드 케네디스쿨 경제학교수는 주장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글로벌 금융을 보다 건전하게 만들고 안전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빈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빈세가 외환거래의 기회비용을 높여 투기적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라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토빈세 세율이 너무 낮을 경우에는 자본이동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환율 변동에 의한 기대수익률이 세율보다 클 경우 낮은 세율의 토빈세 부과는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Davidson(1997)에 따르면 1994~1995년 멕시코의 폐소화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세율이 무려 23%에 달하는 토빈세가 필요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세율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거래비용의 상승을 통해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Shiller(1900), Summers and Summers(1989)등은 높은 거래비용은 거래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외환시장에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도입하면 유동성을 크게 감소시키지 않고 단지 투기적

거래만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투기적 자본이동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회의적일 수 있다.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투기적 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적절한 세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명확하다. 이에 대해서 Spahn(1995, 1996)은 2단계 토빈세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환율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부과하는 폭은 세율의 수준에 대해서는 단순 논의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규모나 발달 정도 외환거래량 등 국가들이 처한 현실이 다름을 고려하면 적절한 세율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단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와 무역거래나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정상거래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도 단기 투기자본을 억제하기 위한 토빈세의 효과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토빈세는 한 나라에서 일방적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금융거래가 역외금융시장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세회피가 발생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토빈세는 모든 대상 거래에 대하여 관련국들이 동시에 과세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조세회피를 고려하였을 때 단일세율의 세계적 과세가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금융시장의 규모나 발달 정도 외환거래량 등 국가별로 처한 현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

Dornbusch(1980)는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외환이 필요한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모든 통화 간 외환거래에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량이 작은 나라들이 통화 간 외환거래 비용이 증가하여 이들 국가들이 통화 관리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최근 G-20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은 토빈세 도입을 지지하였으나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은 반대한 바 있다.

원화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가 특정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거래에 외환거래세를 부과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조세회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자회사 상계 등을 통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거래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실적 도입 가능성의 측면에서 위에서 언급한 Spahn의 2단계 토빈세가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평상시에는 외환거래에 대하여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되 토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환율이 단기적으로 급변하는 비상시에 높은 세금의 부과를 통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탄력세율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를 맞이하였을 경우 토빈세 부과에 대한 국가 간 합의 도출이 용이할 것이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미리 구축하지 않으면 위기 시 단기간 내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향후의 논의는 이러한 탄력적 토빈세를 중심으로 그 실현 가능성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VII. 韓國의 토빈세 導入方向과 課題

토빈세 도입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의 일평균 외환거래량은 196.9억 달러로 이를 기준으로 0.1%의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49.2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⁶⁾

6) 연간 거래일 250일 기준

세계적으로는 2007년 기준으로 현물환에만 0.1%의 토빈세를 부과할 경우 2,513억 달러의 세수가 예상된다.

토빈세를 도입할 경우 이를 관리할 국제기구가 구성되어 토빈세 세수를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각국이 직접 세수를 관리한다면 토빈세로 인한 세수의 형평성이 깨어질 우려가 있으며 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토빈세 제도를 따르지 않을 유인을 지닐 수 있으므로 토빈세로부터 세수는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 우리나라 외환거래액 및 토빈세의 예상 세수>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일평균외환거래액 (현물환)	56.1	86.1	96.8	127.5	185.2	196.9
예상 세수 (0.1% 세율 적용)	14.0	21.5	24.2	31.9	46.3	49.2
예상 세수 (0.5 세율 적용)	7.0	10.8	12.1	15.9	23.2	24.6

자료: 한국은행, 「외환거래 동향」

<표 3 국제시장의 외환거래액 및 토빈세의 예상 세수> (단위 : 억 달러)

구 분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1일평균외환거래액 (현물환)	394	494	568	387	631	1,005
예상 세수 (0.1% 세율 적용)	98.5	123.5	142.0	96.8	157.8	251.3
예상 세수 (0.5 세율 적용)	49.3	61.8	71.0	48.4	78.9	125.6

자료: BI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2007

<표 4 한국의 외환보유액 추이 > (기말기준, 억 달러)

외 환	2007	2008	2009	2010	2011.3월	4월	(4월 중)
외환보유액	2,622.2	2,012.2	2,699.9	2,915.7	2,986.2	3,072.0	85.8
유가증권 ¹⁾	2,317.8	1,803.8	2,488.6	2,679.3	2,717.1	2,719.1	2.0
예치금	299.9	201.0	163.4	189.9	219.3	301.9	82.6
S D R	0.7	0.9	37.3	35.4	37.0	36.2	-0.8
IMF포지션	3.1	5.8	9.8	10.2	11.9	14.0	2.1
금	0.7	0.7	0.8	0.8	0.8	0.8	-

주 : 1) 국채, 정부기관채, 국제기구채,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 등

<표 5 주요국의 외환보유액¹⁾(2011.3월말 현재) (억 달러)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순위	국 가	외환보유액
1.	중 국	30,447 (533)	6.	인 도 ²⁾	3,035 (27)
2.	일 본	11,160 (245)	7.	한 국	2,986 (9)
3.	러 시 아	5,025 (87)	8.	스 위 스	2,802 (52)
4.	대 만	3,926 (19)	9.	홍 콩	2,725 (-2)
5.	브 라 질	3,171 (96)	10.	싱가포르	2,334 (25)

주 : 1) 잔액 기준, ()내는 전월 말 대비 증감 액

2) 2011.3.25일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1.3월말 현재 기준으로 세계 7위 수준으로 외환시장 또는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을 높임으로써, 단기적인 거래를 억제하여 시장의 안정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가와 이를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가가 토빈세 또는 금융거래세의 도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970년대 토빈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이래 그동안 여러 차례의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토빈세에 대한 논의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림1] 외국인 순매수와 증권·외환 시장의 변동(20일 이동평균)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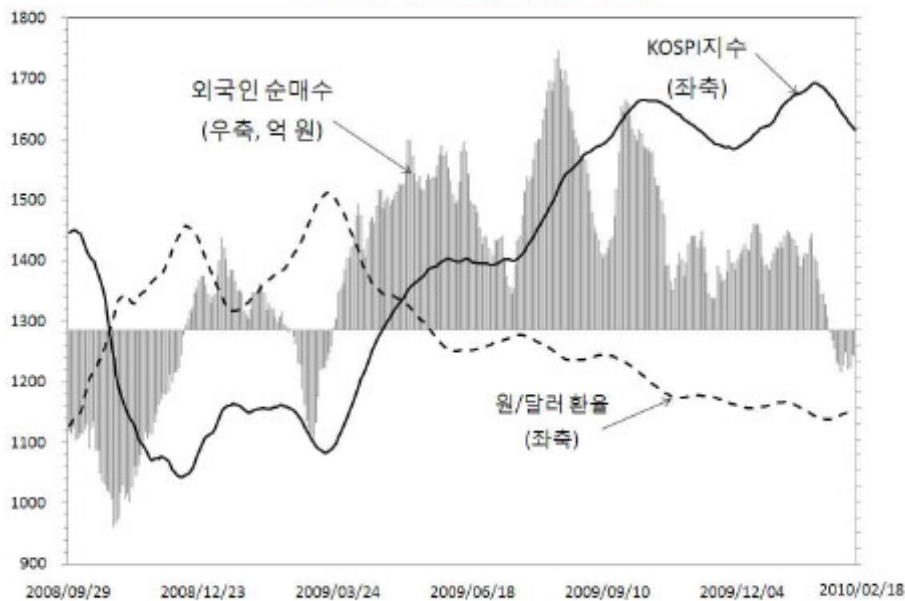


그림 설명=외국자본이 주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의 경우 유럽 주요국의 정부 수반들이 직접 토빈세의 도입을 제안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국제금융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미국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업계의 입장에서는 거래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은 세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수료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다. 결국 세율에 따라 이러한 거래비용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가 결정되고 그것이 유동성이 미치는 영향과 시장안정에 대한 기여도가 어떠할지 판명될 것이다.

Sphan의 2단계 토빈세와 같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는 정책 목적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원화시장과 같은 local market에서는 단독적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이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 외국은행에 외화를 입금하고 해당 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원화를 인출하는 통화스와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원화를 그대로 해외로 송금하여 현지에서 외화로 교환하는 시장이 생성될 가능성도 있다.

위기 시에 직접적인 외환거래 통제 등은 구체적인 시장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단점

이 있는 반면 토빈세를 시장 메커니즘의 일부로서 작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토빈세 부과 목적의 정당성과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제공조의 어려움 등으로 단기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고 우리나라 단독으로 외환 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할 유인도 거의 없다. 따라서 토빈세에 대해서는 최근의 국제적인 논의 전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일단 IMF 보고서와 12개국 1차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투기자금의 급격한 이동 등으로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지는 경우 이에 대처하고 사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른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미리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VIII. 結 論

2010. 06. 23 천안함 대북 강경조치와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친 지난달 말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사이에 30~50원까지 널뛰기를 연출했다. 지난달 마지막 주 한 주 동안에는 100원 이상 급등할 정도로 불안한 외환시장의 주범은 외국자본의 투기성 단기자본이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에 따라 수시로 반복되는 이 같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기성 외환거래에 대한 세금인 토빈세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 단독으로라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연구원 홍범교 연구위원은 '금융거래세 관련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글에서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파생금융상품 시장과 외환시장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해 지나친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제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국제여론이 다소 주춤하지만 금융위기 책임론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여론도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국제공조로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추면 도입이 더 쉽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한국 단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환시장이 안정된 평상시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환율변동이 심할 때에는 투기적 외환거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일종의 서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 성격을 가진 '2단계 토빈세(two tier Tobin Tax)'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토빈세 도입은 외화자금 유치에 있어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브라질이 2009년 외환거래세를 도입한 사례와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원·달러 시장에 외환거래세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제공조 없이도 일단 '2단계 토빈세(two tier Tobin Tax)' 형태로 즉각 도입할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자본유출 부작용 없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외화자금 유출입의 창구역할을 하는 외환시장에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급격한 단기 외화자금의 유출입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편 토빈세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부정적인 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해 국제금융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고, 금융위기 촉발을 막기 위해서는 토빈세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일부 국가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선순환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제 투기자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토빈세'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인 5월 말 증시에서 하루만에 23조가 빠질 정도로 자본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 장관은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및 금융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나리오별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언급만 남겼으나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参 考 文 献

[국문자료]

- 강선주, "IMF 거버넌스 개혁의 국제정치 경제적 의미", 「주요 국제문제 분석」 2009-43호, 외교안보연구원, 2010
- 강철승, "한국의 파생상품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 2009, 1-24.
- 고덕신, "세계화시대의 국제금융과 도덕적 리스크에 따른 대안에 관하여", 「신학연구」 51-247호, 2007
- 김상배, "스마트 파워의 개념적 이해와 비판적 검토", 「국제정치논총」 49-7호, 2009
- 김영도, "파생상품시장 감독 방향", 「주간 금융 브리프」 17-48호, 2008
- 김진영, "국제금융체제의 비판과 개혁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42-51호, 2002
- 김치욱, "국제금융제도 개혁과 중견국가", 「한국정치학회보」 43-271호, 2009
- 김치욱, "국제정치의 분석단위로서 중견국가" 「국제정치논총」 49-7호, 2009
- 문승래, "세계화와 토빈세: 토빈세의 재조명" 「사회과학연구」 10-3호, 2009
- 박영근.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역할", 「KIEP 세계경제」 1999년 10월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박영철·왕연중,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Discussion Paper」 00-02 호, 2000.
- 서병호,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9.
- 이명환, 2009, "주요국의 자본통제와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18권 50호, 2009.12.19-12.24.
- 윤덕형·이형근, 2001, "최근 유럽에서의 Tobin tax 도입논의에 대한 평가," KIET 동향분석 제 01-37호,
- 조명환, "토빈세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조세·재정BRIEF」, 한국조세연구원, 2009
- 최영중, "국제금융의 제도화: 힘과 제도화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6-4호, 2006
- 최영중, "국제금융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49-165, 2009
- 최원기,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 한국에의 함의" 「Jpi정책포럼」, 2009.
- 삼성경제연구소, "대외자본의 허와 실", 2005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의 G-20 리더십 : 2010년 정상회의 주요이슈", 「KIF-IFF 국제컨퍼런스」, (2009)
- 한국은행, "국제금융기구가 하는 일", 2005
- 김인준, 이영섭 "국제경제론" 제6판, 2008
- 박동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과 실재", 2007
- 박성호, "국제경제관계론 : 국제정치경제학", 2005
- 손정식, "국제경제론", 2002.

송영우, “국제정치경제론”, 2002
신장섭, “금융전쟁”, 2009
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제3판, 2006
홍중학, “세계화에 대처하는 진보의 전략 - 분배친화적 개방정책”, 2011.

[영문자료]

Bhagwati, “The Capital Myth. The Difference between Trade in Widgets and Dollars,” 「Foreign Affairs」 Vol.7, No.3, 1989
Cooper, “Niche Diplomacy Niche Diplomacy: Middle Powers After the Cold War”, 1997
Eatwell, J.·Taylor, L.,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2008
Eichengreen·Barry, “Toward a New Internatioal Financial Architecture”, IMF, 2008
“Globalization of Finance and Financial Risks”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politics”, 1984
Keohane, O.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1984
Latham “The Tobin Tax: How to Make it Real. Towards a Socially Respons ” 2000
Rosenau, J. N, “Signal, Signposts, and Symptoms: Interpreting Change and Anomalies in World Politics”, 1995
Stiglitz, J., “A REAL CURE FOR THE GLOBAL ECONOMIC CRACKUP”, 「The nation」 289(2), 2009
Tobin, J. O., “Tax the Speculators, in ; Financial Times, December.
James, N. R, “The Study Of World Politics. Hoboken : Taylor Francis Ltd.”, 2006
John, B., “The Concept of Secu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인터넷 참고자료]

국제통화기구 <<http://www.imf.org>>
세계무역기구 <www.keei.re.kr>
삼성경제연구소 <www.seri.org>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세계은행 <www.worldbank.org>